

산자부, 신기술 인증제품 구입 의무화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은 6월 15일 조달청, 중기청 등 정부기관과 공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공구매 민·관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방안'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 151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지자체는 구매품목 중 20% 이상을 신기술인증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 신기술인증 적용 품목도 기존의 KT(신기술인증·과기부), NT(한국신기술인증·산자부), EM(우수품질인증·산자부), IT(정보통신우수기술·정통부), 전력신기술(산자부) 등 5개에서 ET(환경기술인증·환경부)·CT(건설신기술인증·건교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산자부는 우선 산하 43개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거쳐 구매기피 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재구매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두번째로 구매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공공기관의 구매를 전제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자부, 中企 IT화에 최대 150억원 지원

정부가 하반기 중 최대 150억원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 자금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신규 전자적자원관리(ERP)시스템 구축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올해 편성이 확정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추경예산을 국회통과와 동시에 이같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6월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사업의 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해 이미 확보된 예산 내에서 추가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주로 ERP구축 지원사업에 편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IT화 사업은 크게 ▲IT화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ERP,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모바일비즈니스 연계) ▲협업적 IT화 지원(SCM, 모기업과 협력업체 IT화) ▲IT화 콜센터를 통한 AS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통부, 국산 SW 활성화 대안 마련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6월 16일 소프트웨어업체 대표들과 '정보통신부장관 및 소프트웨어업계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장관의 현장 방문은 소프트웨어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육성과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서 진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2만개 IT기업의 시장 상황과 업체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업체들은 국내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활성화와 공공기관이 나서 국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장관은 이 같은 업계의 건의에 대해 "정부는 국내 중소소프트웨어업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장관을 비롯해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정책자문관, KIPA원장이 참석했다.